

▶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자동차융합기술원 행감

정진세 “특감 징계요구에 솜방망이 처분”

이현숙 “최근 3년 동안 기술이전·기술료 수입내역 전무”
백경태 “기관 명칭 변경하고 조례 개정은 안 해”
김현철 “해외출장 지원, 외유성으로 흘러”



정진세 의원 이현숙 의원 백경태 의원 김현철 의원

특감을 통해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동차 기술원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자체 인사위가 낮춰 ‘체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의회 농산경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가 실시한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정진세(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난해 말 특별감사를 받은 자동차기술원이 전북도로부터 총 22건에 대한 신분상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훈계 45명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면서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기술원은 지난 2월 26일 인사위원회 회를 열고 경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징계 심의 의견을 처리한 결과, 정지 1월의 중징계 의견이 4명, 나머지 6명은 훈계로 처분한 것. 이어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지 2~3개월의 중징계는 정지 1개월로, 감봉 등의

경징계는 훈계로 감경 처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현숙(비례, 민주연합당) 의원은 최근 3년 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료 수입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기술원 R&D 예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만 574억 원에 달하며 기술원 사업비만 101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됐다”면서 “최근 3년 동안 기술이전 및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에 의구심이 들며,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기술원 사업이 고용창출과 매출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전북도와 기술원의 자치법규 경시 태도를 비난했다. 백 의원은 “지난 8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단행하지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자치법규이자 자동차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인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다룬 경제산업국도 문제지만, 정관 변경만 하고 조례 개정 작업을 미시한 기술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철(진안) 의원은 자동차기술원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해외시장개척

등 해외출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기술원의 자의적인 지원방식을 비판했다. 김현철 의원은 “기술원은 아세안 시장개척단 파견, 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뿌리산업 유럽 금형시장개척단 등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아 사업신청에 있어서도 기업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기술원은 선정평가위원회도 열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외 시장개척단, 선진지 벤처마킹, 해외 박람회 등의 지원 사업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관행적인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다”면서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이정희를 특별검사로”

네티즌들 ‘강추’… 채동욱·윤석열도 주목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 후보로 정치권에서 여러 인사가 거론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단연 두드러진다.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이정희’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3위 등 상위에 올라있다. 특검으로 임명하지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이끌며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특히 지난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등 거침없는 발언을 잇따라 내며 ‘박근혜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통진당은 지난 2014년 헌정사상 최초의 ‘내란 음모’ 사유로 해산당했다. 이 전 대표로서는 이래저래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검을 맡으면 누구보다 엄정하고 강력하게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당수 네티즌의 의견이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SNS에 남긴 마지막 글에서 “독재 회귀를 막고 직실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출해내 주십시오”라며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폭력을 함께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정희가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웃겼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검사들 다 못났잖아 이정희가 특검임을 맡으면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이다 ‘윤***’은 “소신이 뚜렷해 휘둘리지 않을 인물이 많아야 조사를 확실히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여론도 없지 않는데, 통합진보당이 ‘종북’ 문제로 해체된 것을 주로 문제 삼는다.

네티즌 ‘화***’은 “통진당이 해체된 것이 최순실 측의 노력 때문이었다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중북행위에 대한 의심이 깊다”며 “이정희가 특검으로 뽑히는 것은 보수진영과 싸움을 하지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도 인터넷과 SNS에서 자주 거명된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됐다가 3개월만에 사임한 인물이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채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추천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네티즌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 정당으로서 검토해볼만 하다”며 “본인의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활동할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으로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이 댓글 개입 의혹 관계자 수명을 체포했으나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윤 검사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지시 자체가 위반한데 어떻게 따르냐.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뉴시스

문재인 “정계는퇴 발인” 총선 승리위한 전략적 판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난 총선 당시 광주에서의 ‘정계는퇴’ 발언과 관련,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광주 발언은 당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광주 시민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며 고개숙였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그 당시 맥락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며 “광주와 호남의 지지가 없다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정치도 그만둘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돼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의 분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어떻게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며 “광주와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광주에서는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명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운천 “예산심사 호남책임 위원 위촉 약속받아”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기재부와 의 핫라인 개설 약속도 이끌어냈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의원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당내 호남책임 위원에 위촉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로부터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 원내대표에게 2가지 사항

을 요구한 결과, 이번 예산심사에서 호남 책임 위원으로 위촉받기로 했다”며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과 함께 전북도 예산을 조율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전북도 예산을 위한 기재부와 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3총선 당시 꼭 막힌 중앙

예산의 통로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전북도 민을 위해서라면 여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고 한 약속들을 이번엔 꼭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에서 배제된 후 국회 본관에서 3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문재인 “전국적 퇴진운동 하겠다” “박 대통령 하야가 탄핵 추진보다 우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나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지만 박 대통령은 나와 우리 당의 총

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하야 후 계획에 관해선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거국중립 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과도내각은 국정을 혼란없이 수행해 나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나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취해야 할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의 하야가 탄핵 추진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 탄핵 절차가 밟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김광수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밝혀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 “온갖 설이 난무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날날이 밝히면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특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왜 안 밝히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위 질의에서 제가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누구 하나 답답할 만한 답변을 못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간대별 대통령의 조치사항에 따르면 4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지만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본 사람이 없고 어떤 지시도 없었다. 무슨 일을 했냐”며 “7시간 만에 나타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혹의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청상에 없었음을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대면보고와 지시를 못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의혹이 나오고 성형수술, 프로포폴 시술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이 보건·의료 분야에까지 손길을 뻗치고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실은 자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린다”며 “어슬픈 변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사적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 역설했다./뉴시스

이정현 3선 간담회 소집에 1명 참석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당내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단 1명만 참석하는 ‘골목’을 당했다.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재한 3선 의원 오찬 회동에 12명이나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대표는 당내 24명의 3선 의원 중 대부분이 불참 의사를 전해오자 공개 회의를 비공개로 바꿨다.

결국 이날 회의를 참석한 의원은 안상수 의원 뿐이었다. 윤상현, 유재중, 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마저 불참했다. /뉴시스